

<要 約>

I. 鄧小平의 改革·開放 政策

- (目的) 중국이 1979년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궁극적인 목표는 현 정권의 유지·발전에 있음(즉 개혁·개방이 현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연결되어 있음).
- (成功 要因)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한 요인은 정치, 경제 및 사회 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덩소평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展望) 개혁·개방 정책이 순조로울 경우, 2010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자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II. 鄧小平 以後의 中國

- (政治 展望) 중국은 鄧小平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集團指導體制를 유지함으로써 정치적인 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經濟 展望) 鄧死後에도 改革·開放 政策은 지속될 것임. 그러나 권력 승계의 과도기에는 안정 위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볼 때,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地方分權化) 鄧死後 소수 민족 또는 지방 세력에 의해 중국이 분열될 가능성은 희박함. 아울러 地方分權化 추세가 중국의 분열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圈域別 經濟圈의 浮上) 鄧死後 강력한 카리스마가 부재한 상황에서 地方分權化가 가속될 것이며, 이와 함께 경제적인 실익에 따라 형성되는 「圈域別 經濟圈」이 구체화 될 것임.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영향력은 점차 제고될 것임.

III. 鄧小平 死亡이 東北亞 情勢에 미치는 影響

- (影響) 鄧의 사망이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혁명 1세대인 鄧의 사망은 江澤民을 위시한 제3세대 지도자들의 정책 결정 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며, 관료 출신인 이들이 주도하는 중국은 보다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할 것임.
- (對韓半島 政策) 鄧의 사망을 계기로 北中 관계는 「혈맹 관계」에서 「통상적인 외교 관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반면 韓中 관계는 경제적인 실익을 바탕으로 정치·경제면의 교류 확대가 예상된다.
- (外國 企業에 對한 影響) 鄧死後 중국은 권력 승계의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된 경제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外國 기업(한국 기업 포함)의 對中 교역과 투자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IV. 企業의 對應 方案

- (中國 市場에 對한 姿勢) 중국을 단순한 수출 시장 혹은 값싼 노동력의 공급원으로 보는 시각에 벗어나야 함. 아울러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세에서 접근해야 함.
- (交易 및 投資 方案) 鄧死後 「圈域別 經濟圈」의 부상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對中 교역이나 투자도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

I. 鄧小平의 改革·開放

- (目標)중국이 1979년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궁극적인 목표는 현 정권의 유지·발전에 있음(즉 현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연결되어 있음).
- (成功 要因)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한 요인은 정치, 경제 및 사회 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덩소평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展望)개혁·개방 정책이 순조로울 경우, 2010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

1. 改革·開放 政策의 核心 內容

(1) 實施 原因

- 근본적인 원인: 毛澤東에 의한 사회주의 실험이라 할 수 있는 文化大革命의 실패에 따른 후유증, 즉 경제 파탄.
- 구체적인 원인:
 - 경제 제도(계획 경제)의 폐단: 公有化, 폐쇄 경제로 인한 경제 발전의 활력 부재.
 - 지도 Ideology의 폐단: 계급투쟁 위주, 정치우선주의, 지도층의 주판과 독단으로 인한 자원 낭비 등.
 - 외부로부터의 영향: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중국보다 발전이 빠른 동구, 한국·臺灣·싱가폴·홍콩 경제의 급속한 성장.

(2) 理論的인 背景

- 「中國式社會主義(社會主義的인 要素 + 中國的인 要素)」라는 개혁 이데올로기 표방.
- 1980년대 후반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 「社會主義初級段階論」 제시.
- 중국측에서 말하는 社會主義初級段階란 공산당 정권 수립 연도인 1949년부터 2050년까지의 100년간을 가리키는 것임.
- 이 기간 동안 사회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도입·활용

할 수 있다는 논리임.

- 중국은 상기 이론을 근거로 지역간・계층간 격차 인정, 사유제 인정 등의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도입함.
- 아울러 상술한 이론으로 경제적인 변화가 정치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도식을 적절히 차단시킴.

(3) 改革・開放 政策 實施로 인한 3大 變化

- 소유형태: 一元化(단일소유제:국유) --> 多元化(全民所有制: 국가 소유, 集體所有制: 집단 소유, 個體所有制: 개인 소유 등).
- 관리방식: 직접 관리 --> 간접 관리(중앙 정부의 매크로관리가 행정 수단에 의한 직접 관리에서 시장 조절의 경제 수단에 의한 간접 관리로 점차 이행).
- 분 권 화: 중앙 정부의 권한 --> 지방 정부와 기업으로 이양.

(4) 特徵

- 중국의 개혁・개방은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글라스노스트와는 달리 아래와 같은 특징을 띠고 있음.
 - ・개방의 순서가 4個 經濟特區 --> 14개 沿海 都市 --> 3大 三角洲 --> 全方位 개방(點 --> 線 --> 面)으로 점진적인 방법을 취함.
 - ・그동안 실시된 각종 정책은 시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함. 즉, 정책을 실시하되 먼저 시행착오를 거친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지극히 시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 中國式 개혁・개방의 정의
 - ・지역적으로는 부분적: 수도로부터 먼 지역의 일부부터 개방(개혁・개방으로 인한 체제 내외부로부터 오는 충격 최소화에 목적).
 - ・성격적으로는 시험적.
 - ・방법적으로는 점진적.

(5) 實施 目的

- 점진적이고 시험적인 개혁・개방 정책 실시 --> 체제내・외적 충격 완화 --> 현 체제의 안정 유지 --> 안정된 환경을 바탕으로 부의 창출・축적 -->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 --> 현 정권의 정당성 확보 --> 현 정권의 유지・발전.
- 결국 개혁・개방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 공산당 정권의 유지・발전이 있음(따라서 현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연관되어 있는 개혁・개방을 중지할 수는 없음).

2. 成功 要因

(1) 政治的인 要因(改革에 有利한 安定된 政治的 環境 造成)

- 구소련이 정치부터 개혁을 시작한데 비해, 중국은 먼저 경제를 중심으로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정권 내부의 정치적인 충돌을 최소화한 점.
- 「中國式社會主義」라는 시간적·공간적인 여지가 많은 개혁 이데올로기를 표방함으로써 당내 각 파벌간의 포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양체제간 갭 축소가 가능했다는 점.
- 상술한 개혁 이데올로기에는 「社會主義的인 要素」외에 「中國的인 要素」가 결합되어 있어, 주변 사회주의 국가 붕괴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

(2) 經濟的인 要因

- 12억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보유한 외국 자본에 대한 유인력.
 - 금세기말 13억, 21세기 15억 인구 예상.
- 對중국 전체 외국 투자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화교 자본의 역할.(<표1>참조)
 - 특히 홍콩, 대만, 마카오 자본의 역할
 - 홍콩 자본의 많은 부분이 동남아 화교 자본에 뿌리를 두고 있음.
- 이미 외부 세계와 연계되어 있던 홍콩의 존재와 활용.
 - 계획경제 체제하에 폐쇄 경제로 인한 대외적인 약점을 홍콩을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보완.
 - 홍콩과 인접한 深圳 經濟特區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

(3) 社會 心理的인 要因

-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에는 毛澤東이 집권할 때와는 달리 인센티브 구조를 공보다는 私, 精神보다는 物質에 중점을 뒀으로써, 그동안 평균주의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논리에 억눌려 왔던 중국인 특유의 금전관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는 점.
 - 競爭, 致富, 消費 개념 도입
 - 先富論(능력이 있고 여건이 허락되는 사람과 지역은 먼저 부유해 질 수 있다는 논리)의 실시.

(4) 鄧小平의 리더십

- 전통과 개혁의 적절한 조화.

-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제도의 결합 및 활용(社體資用).
- 정권내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조정 역할 등.
 - 政左經右(정치는 左傾, 경제는 右傾) 노선 지향.

<표1> 중국 전체 實際 利用 外資中 H.K, 마카오, 臺灣 資本의 比率
(단위: 억 달러)

연 도	총 액	H.K, 마카오 자본	대만 자본	H.K, 마카오 대만자본 비율
1985	19.95	9.56(48.88%)		48.88 %
1986	21.72	13.29(61.19%)		61.19 %
1987	26.47	18.09(68.34%)		68.34 %
1988	37.39	24.28(64.94%)		64.94 %
1989	37.73	23.42(62.07%)		62.07 %
1990	37.55	21.18(56.40%)	2.24(5.97%)	62.37 %
1991	56.66	26.62(57.05%)	4.72(10.12%)	67.17 %
1992	112.91	79.09(70.05%)	10.53(9.33%)	79.38 %
1993	257.59	-	-	-

자료: 中國統計年鑑, 각 년도.

1993년 총액은 國際商報(1994.1.29), 제1판.

주: 臺灣 자본은 미국이나 일본 등지의 회사 명의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臺灣 자본의 실제 비율은 통계 수치보다 높음.

3. 結果 및 展望

(1) 成果

- 과거 10여년 동안 년 평균 9%이상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기록으로 소위 溫飽 問題(먹고 입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며, 금세기말까지 소위 小康社會(1인 당 국민 소득 1000 달러 정도 수준의 사회)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경제력(구매력 기준)
 - IBRD: 92년 GDP 2조 3,500억 달러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제3위.
 - IMF: 92년 GDP 1조 6,600억 달러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제3위.
- 92년 1인당 GDP(표2 참조)
 - 환율 기준(IBRD, IMF --> 370 달러).
 - 구매력 기준(IBRD --> 2,040 달러, IMF --> 1,450 달러).
- 93년 260억 달러의 외자 유치로 미국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가 높은 지역(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94. 8)으로 부상.

- 최근 경제 성장율(GDP)
 - 92년(12.8%) --> 93년(13%) --> 94년(11.8%) --> 95년(10% 예상).
 - 96년 - 2000년(11%대의 성장 예상: 中國 國家統計局)

(2) 副作用

- 정치와 경제간의 괴리 발생: 경제 개혁의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정치 개혁.
- 지역간의 괴리 표면화: 경제 발전과 더불어 각 省간의 배타성 증폭.
- 경제 발전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사회간접자본.
- 부정부패 만연.
- 도농간·계층간·지역간 소득 격차 심각.
- 농촌 잉여 노동력의 도시 유입(盲流)으로 인한 사회 문제화 등.

(3) 向後 中國 經濟力 展望

- IBRD: 2020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IISS(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0년경 중국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자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학자에 의하면 3억 8천만 인구의 유럽공동체 경제가 21세기에는 러시아와 동유럽권이 가입함으로써 9억의 시장으로 확대되어 세계 무역의 법칙을 지배한다고 예측했음.
- 그러나 중국의 시장 경제가 성공한다면 21세기 15억의 성숙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세계 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것은 통합 유럽이 아닌 중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표2> 구매력 평가에 의한 세계 경제 규모(1992)

순 위	국가명	GDP(10억 달러)		1인당 GDP(달러)	
		신평가	구평가	신평가	구평가
1	미국	5,610	5,610	22,204	22,204
2	일본	2,370	3,360	19,107	27,132
3	중국(IBRD)	2,350	430	2,040	370
	(IMF)	1,660	430	1,450	370
4	독일	1,250	1,570	19,500	24,585
5	프랑스	1,040	1,200	18,227	21,022

자료: The New York Times, 1993. 5. 20.

주: 1)구소련은 제외되어 있음.

2)신평가(구매력평가환율 기준-PPP), 구평가(시장환율 기준).

II. 鄧小平 以後의 中國

- (政治 展望)중국은 鄧小平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集團指導體制를 유지함으로써 정치적인 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經濟 展望)鄧死後에도 改革·開放 政策은 지속될 것임. 그러나 권력 승계의 과도기에는 안정 위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地方分權化)鄧死後 소수 민족 또는 지방 세력에 의해 중국이 분열될 가능성은 희박함. 아울러 地方分權化 추세가 중국의 분열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圈域別 經濟圈의 浮上)鄧死後 중국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부재한 상황에서 地方分權化가 가속될 것이며, 이와 함께 경제적인 실익에 따라 형성되는 「圈域別 經濟圈」이 구체화 될 것임. 또한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영향력은 점차 제고될 것임.

1. 政治 展望

(1) 鄧死後 權力 承繼 시나리오

- 현 시점에서 볼 때, 鄧사후 권력의 향배는 승계 주체에 따라 온건 개혁파에 의한 승계, 보수파에 의한 승계, 급진 개혁파에 의한 승계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 3가지 시나리오에 근거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3> 權力 承繼 主體에 따른 變數 및 人的 構成

권력 승계 주체	총괄 변수	권력 기반	주요 인물	동조 집단
온건 개혁파 (중도 포함)	-보수파 일부 -군부 일부	鄧의 부재와 江澤民의 권력기반 약화로 인한 다소 불안정	江澤民, 喬石, 李瑞環, 劉華清, 胡錦濤	-일반 민중 -軍部 일부 -鄧을 비롯한 일부 元老
보수파	-온건 개혁파 일부 -급진 개혁파	지지기반 상존 (점차 감소 추세)	陳雲, 李鵬 계열	-軍部 일부 -일부 元老 -北京派
급진 개혁파	-보수파 -군부	지지기반 미약(점차 증가 추세)	朱鎔基, 趙紫陽 계열	-지식 분자 -일반 민중

<표4> 權力 承繼 主體에 따른 經濟 改革의 向方

권력 승계 주체	목 표	개혁의 폭과 속도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정책 부작용 대처 방안	비 고
온건개혁파 (중도 포함)	자율성이 포함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안정 지향적 인 성장	중앙집권을 바탕으로 한 자율성 유지	행정수단과 시장기능을 통한 대처방안 모색	현시점은 물론 鄧사후 과도기에 접수 가능성이 가장 높음
보수파	자율성이 제한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안정 지향	중앙통제 지향	주로 행정수단에 의거	지지기반 점차 축소 경향
급진개혁파	시장경제 지향	고속 성장	지방의 자율성 제고	주로 시장기능에 의거	지지기반 점차 확대 경향

- 이상의 분석 내용에서 볼 때, 鄧사후 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集團指導體制가 형성되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1980년 이후 10여 년에 걸친 鄧小平의 주도 면밀한 후계구도 준비
 - 鄧死後 일부 생존 元老 권력 조정 역할 --> 권력층 내부의 안정성 유지
 - 당내 정권 유지를 위한 계파를 초월한 공감대 형성
 - 공산당 정권에 대한 도전 세력 부재(기타 정당 및 이익 단체 부재)
 - 중앙 집권에 의한 강력한 정부를 희망하는 인민들의 기본 의식
 - 정치에 무관심한 민중의 정치문화
 -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 --> 인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 점진적이고 시험적인 성격의 개혁·개방 정책 -->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체제내·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완화·흡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개방적인 사고의 지배와 세계 경제 일원으로서의 중국 경제

(2) 現 政權內 江澤民의 位相(上海派와 北京派, 江澤民과 軍部)

- 上海派의 구성은 江澤民이 시장, 당서기를 역임한 적이 있는 상해시 근무 연고자, 江澤民의 고향인 江蘇省 揚州 일대와 上海를 중심으로 한 지역 연고자 및 1930년대 江澤民과 같이 上海에서 중국 공산당 지하 활동에 가담한 경력 연고자로 이루어져 있음.(부록 참조)
 - 근무 연고자: 朱鎔基(부총리), 黃菊(상해 시장), 吳邦國(정치국원) 등.
 - 경력 연고자: 錢其琛(외교 부장), 喬石(전국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 지역 연고자: 丁關根(정치국원, 당중앙선전부장), 李嵐清(정치국원, 부총리) 등.

<표4> 政治局 常務委員(7人)의 成分 및 位相

위원	출신지	연령	학력(전공 분야)	입당 연도	현직책	성향	비고
江澤民	江蘇省 揚州市	69	上海 交通大(電氣)	1946	黨總書記, 國家主席, 政治局 常務委員, 黨中央軍事委員會 主席 등	온건 개혁	-黨·政·軍의 공식 직책을 모두 장악 -군부의 배경이 없다는 정치적인 약점 -黨內 권위(결속력) 미약
李 鵬	四川省 成都市	67	모스크바 동력大(電氣)	1945	政治局 常務委員, 國務院 總理	보수	-인민들의 지지도가 매우 낮음 -개인적인 능력에 대해 회의적임
喬 石	浙江省 定海縣	71	華東聯合大	1940	政治局 常務委員, 全人大 常務委員長	중도	-검찰, 사법, 경찰, 보안(정보), 무장경찰 계통을 장기간 장악 -黨內 각 파벌과 교감 가능 -鄧사후 당내 권력 조정력 발휘 가능성
李瑞環	天津市 寶坻縣	61	北京 建築工程業餘學院(建築)	1959	政治局 常務委員, 政治協商會議 主席	중도	-노동자 출신 -共產青年團 출신 -연령면에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
朱鎔基	湖南省	67	清華大(電氣)	1949	政治局 常務委員, 副總理, 人民銀行 長	급진 개혁	-경제개혁의 선두주자(중국의 고르바초프) -급진적인 성향으로 黨內입지 약화 경향
劉華清	湖北省 大悟縣	79	소련 해군 대학	1935	政治局 常務委員, 黨中央軍事委員會 副主席	온건 개혁	-鄧小平의 측근 -共產青年團 출신 -政治局 常務委員중 유일한 軍 출신 -고령이라는 약점
胡錦濤	安徽省	53	清華大(水利工程)	1964	政治局 常務委員, 黨中央書記處 書記	온건 개혁	-共產青年團 출신 -상무위원중 유일한 50대라는 연령상의 강점 -장래가 촉망됨

- 이 上海派은 주로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기술 관료 출신들이 많고,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또한 이들은 공산당내 개혁파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北京派으로 일컬어지는 보수 세력에 배치되는 입장에 있음.
- 일반적으로 鄧小平의 후계자인 江澤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후계체제에 대해 불안감을 거론하고 있음. 그 이유는 江澤民이 비록 黨中央軍事委員會와 國家中央軍事委員會의 주석직에 있으나 관료 출신으로 군부의 배경이 전무한데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江澤民은 그동안 군부내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음. 이와같이 군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역대 정권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군이었으며, 군의 장악은 곧 정권의 장악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임.
 - 특히, 중국 군부 지도층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山東省 출신 군지도자들과 교감을 형성하고 있어 자신의 약점을 어느정도 보충하고 있음. 山東省 출신의 군부 핵심 인물(일명 山東派)로는 遲浩田(66) 국방부장, 張萬年(67) 총참모총장, 張連忠(64) 해군사령관, 徐惠滋(63) 부참모총장, 李景(65) 부참모총장, 王瑞林(66) 총정치부 부주임 등이 있음.

(3) 中·短期的인 展望

- 이상의 분석 내용을 근거로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관건은 결국 당 권력층내 타협과 조정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즉 가까운 장래의 중국을 전망하려면 정권 내부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임.
- 구체적으로 전망하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鄧의 발언과 毛澤東이나 鄧과 같이 黨·政·軍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동시에 보유한 인물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할 때, 鄧사후 중국 정치는 政治局常務委員會를 중심으로 한 集團指導體制 형태를 유지하되, 업무 분담형의 정치구조(예를 들어 江澤民의 黨, 李鵬의 政, 朱鎔基의 經濟 등)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아울러 중요 정책에 관한 최종 결정은 萬里를 비롯한 생존 元老들의 자문과 조정을 거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 현 시점에서 볼 때, 江澤民의 권력 기반이 확고하다고는 볼 수 없음.
- 현 지도층과 원로층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적어도 1997년 15차 당대회까지는 集團指導體制가 유지되거나, 이 체제를 바탕으로 한 1인 우위 체제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4) 장기적인 전망

- 장기적으로 중국 정치는 人治에서 法治로 점차 이행되어 나갈 것임. 즉, 전통적

이고 카리스마적인 권위에서 법적인 권위로 전환될 것임.

- 중국 정치문화의 특성을 근거로 분석하면, 集團指導體制라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일당 지배 체제하에서 민주적인 요소(형식에 불과한 人民代表大會의 권한 확대, 공산당외에 존재하고 있는 8개 民主黨派의 활성화, 비당원의 관료 임용, 재야 단체의 인정 등)가 가미되어 나갈 것임.
- 그 이후에는 당의 본질이 서서히 변화하면서 과거 일본 자민당에 의한 일당 우위 체제하의 파벌 정치와 같이 공산당 위주로 운영 하되 당내 각 파벌이 정권을 주도해 나가는 상황이 되거나, 소수 야당의 출현 혹은 당내 일부 파벌이 다른 야당과 연합하여 다당제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2. 經濟 展望

(1) 鄧死後 中國의 經濟 政策 展望

- 鄧死後 개혁·개방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속될 것임. 단지 정치·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그 폭과 속도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임.
 - 鄧死亡 소식 발표이후 중국 경제는 주가 하락등 일시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심각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물론 중국 경제의 안정 회복은 정치적인 안정과 맞물려 있음에 유의해야 함.
- 鄧死後 안정된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금융 조정 정책의 확대 실시 등 새로운 긴축 조정 정책이 돌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鄧死後 중앙 정부과 지방 정부간의 관계 정립을 위한 새로운 조치가 예상됨. 전반적으로 경제 관련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 外國 投資 企業에 對한 影響

- 鄧死後 외국 기업은 對中 투자와 관련 당분간 관망 자세를 취할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단기적으로 외국 기업의 對中 투자 건수와 액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첫째, 鄧死後 중국 내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 둘째, 투기 목적의 외국인 투자를 근절하기 위한 엄격한 금융 정책 실시.
 - 셋째, 地價 및 임금 상승, 세계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 등 투자 환경의 변화.
 - 넷째, 베트남, 인도 등 제3의 유망 시장으로 외국인 투자 이전 등.
- 물론 외국 기업의 대중 투자 추이는 중국 국내 정치 안정·불안정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임.
- 현재 중국내에는 모든 외자 기업이 중국 경제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는 관점이 대두하고 있음. 즉, 외자 기업에 대한 중국측의 시각이 바뀌고 있음. 따라서 향후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중국측의 태도 변화가 예상됨.

- 첫째, 지난 15년 동안 무분별하게 유치해 왔던 외국인 투자를 앞으로는 핵심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선별 유치할 것임. 즉, 투기성(부동산) 보다는 생산성(SOC), 노동집약적보다는 자본·기술집약적, 소비재보다는 생산재, 오염 분야 보다는 비오염 분야 등에 치중된 업종을 선별 유치할 것임.
- 둘째,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련된 각종 업무, 즉 노무 관리, 수출입 관리, 세수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임.

(3) 圈域別 經濟圈 부상

- 한편 鄧사후 중국의 경제 전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그동안 鄧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강력한 카리스마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 분권화 추세가 가속화될 것임.
 - 아울러 이러한 분권화 추세가 중국 특유의 지역적인 배타성과 결합하여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는 사실임.
- 따라서 향후 이러한 지방 분권화 추세는 「자연스런 경제적 영토」(NET: Natural Economic Territories)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 중국내 권역별 경제권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현상은 이미 廣東省, 福建省, 홍콩, 臺灣을 중심으로 한 華南經濟圈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권역별 경제권은 東北經濟圈, 環渤海經濟圈, 黃河中流經濟圈, 上海經濟圈, 長江中流經濟圈, 長江上流經濟圈, 華南經濟圈 등 7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음.(表5참조)
 - 현시점에서 우리 기업이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곳은 環渤海經濟圈, 上海經濟圈, 華南經濟圈 등 개혁·개방 정도가 높고 항구를 끼고 있는 지역이며, 2차적으로는 長江中流經濟圈, 東北經濟圈, 長江上流經濟圈, 黃河中流經濟圈 등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업 기반이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
 - 기타 新疆省(위구르 차치구), 西藏自治區(티벳), 雲南省, 青海省, 甘肅省, 寧夏回族自治区, 內蒙古自治區 등 지역은 현시점에서 볼때, 특수한 목적(자원 개발 등)을 제외하고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 상기 7개 권역은 중국 전체 면적의 45% 정도 점하고 있지만, 인구는 9억 6천 만명 이상으로 중국 전체의 82%를, GNP는 4,127억 달러로 중국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음.
- NET와 연관성이 깊은 省일수록 중앙 정부와의 관계보다 NET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예를 들어 廣東省을 비롯한 沿海 지역의 省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심함).

<표5> 圈域別 經濟圈의 現況 및 展望

권역별 경제권	소속 ·성·자치구	중심 도시 (省都)	주요 도시	권역별특징 (전망)	관련 주변 국가·지역
東北經 濟圈	黑龍江省, 吉林省, 遼寧省	瀋陽, 하얼 빈 (瀋陽, 長春, 하얼빈)	大連, 營口, 鞍山, 盤 錦, 遼陽, 鐵嶺, 撫順, 吉林, 丹東, 琿春, 延 吉, 치치하얼, 大慶, 佳木斯, 牡丹江	중공업 기반, 조선족 활용 가능, 낮은 임금, 변경무역 가능, 對北韓 교역 유리(향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	러시아, 일본, 한국(북한)
環渤海 經濟圈	北京, 天津, 河北省, 山 東省	北京, 天津 (濟南, 石家 庄)	秦皇島, 唐山, 廊坊, 張家口, 青島, 濰博, 濟寧, 煙台, 威海, 東 營,	공업기초 양호, 첨단산 업 기반, 한반도와 인 접 (향후 華北 지역 경 제 중심지)	일본, 한국
黃河 中流經 濟圈	山西省, 陝 西省, 河南 省	西安 (西安, 太原, 鄭州)	洛陽, 大同, 長治, 開 封, 平頂山, 許昌,	자원·에너지 풍부, 낮 은 임금,	
上海經 濟圈	上海, 江蘇 省, 浙江省	上海 (南京, 杭州)	連雲港, 南通, 無錫, 蘇州, 常州, 徐州, 鎮 江, 揚州, 嘉興, 湖州, 紹興, 衢州, 寧波, 溫 州,	높은 개방·소비 수준, 인 재·기술 풍부 (향후 중국 경제의 중심 지)	일본
長江 中流經 濟圈	安徽省, 江 西省, 湖北 省, 湖南省	武漢 (武漢, 合肥, 南昌, 長沙)	馬鞍山, 蕪湖, 安慶, 銅陵, 黃山, 九江, 衡 陽, 株州, 黃石, 鄂州, 岳陽, 宜昌, 襄樊	上海경제권과 연계지 역, 수송 용이 (내륙의 경제권증 발 전 가능성이 가장 높 은 지역)	
長江 上流經 濟圈	四川省, 貴 州省, 雲南 省	重慶 (成都, 貴陽, 昆明)	北海, 攀西, 宜賓, 六 盤水, 樂山, 自貢, 瀘 州	중공업 기반, 낮은 임 금, 변경무역 가능 (향후 남쪽국가와 경제 권 형성가능)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華南經 濟圈	廣東省, 福 建省, 廣西 壮族自治区, 海南省	廣州 (廣州, 福州, 南寧, 海口)	廈門, 漳州, 汕頭, 惠 州, 韶關, 深圳, 東 莞, 中山, 珠海, 佛山, 桂林, 梧州, 柳州, 湛 江, 肇慶, 北海, 三亞	가장 높은 개방·소비 수준, 경공업 기반, 이 미 실질적인 경제권 형성 (華南지역 경제의 중 심지, 동남아 국가와의 연계)	홍콩, 대만, 마카오, 베 트남(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 도네시아)

주: 華南經濟圈이 동남아 국가와 연계되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라는 근거는 동남아 지역에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화교들이 福建省과 廣東省 출신이라는 데 있음.

<표6> 中國 經濟의 總量 指標의 圈域別 分布(1992)

	人 口		面 積		G N P	
	人口數 (萬名)	成 比 (%)	面 積 (千km ²)	成 比 (%)	實績 (億元)	構成比 (%)
全 國 總 計	117,171	100.0	9,600.0	100.0	24,036.2	100.0
7 個 經 濟 圈 的 合 計	96,105	82.0	4,338.3	45.2	22,668.5	94.3
東 北 經 濟 圈	10,156	8.7	802.4	8.4	2,668.4	11.1
環 渤 海 經 濟 圈	16,212	13.8	349.8	3.6	4,256.3	17.7
黃 河 中 流 經 濟 圈	15,245	13.0	528.6	5.5	2,225.9	9.3
上 海 經 濟 圈	12,492	10.7	210.6	2.2	4,264.5	17.7
長 江 中 流 經 濟 圈	21,594	18.4	704.6	7.4	3,206.6	13.3
長 江 上 流 經 濟 圈	18,191	15.5	1,138.0	11.9	2,334.1	9.7
華 南 經 濟 圈	14,707	12.6	604.3	6.3	3,712.7	15.4

자료: 「中國經濟統計年鑑, 1993」, KIET.

주: 1) 經濟區를 經濟圈으로 표기함.

2) 長江三角洲經濟區를 上海經濟圈으로, 南方沿海經濟區를 華南經濟圈으로 표기함.

<표7> 中國의 圈域別 經濟 規模 및 市場 潛在力(1992)

	1人當 GNP		人口 1萬名當 工業 生産額		住民 1人當 平均 消費額		1人當 社會商品 小 賣 總 額	
	實績(元)	指數	實績(萬元)	指數	實績(元)	指數	實績(元)	指數
全 國 總 計	2,051	100.0	3,163	100.0	803	100.0	938.3	100.0
東 北 經 濟 圈	2,627	128.1	4,114	131.0	918~1,192	114.3~148.4	1,309.4	139.5
環 渤 海 經 濟 圈	2,625	128.0	4,547	143.8	715~1,453	89.0~180.9	1,170.7	124.8
黃 河 中 流 經 濟 圈	1,782	86.9	1,950	61.7	534~642	66.5~80.0	646.7	68.9
上 海 經 濟 圈	3,414	166.5	7,686	243.0	909~2,303	113.2~286.8	1,490.2	158.8
長 江 中 流 經 濟 圈	1,485	72.4	1,863	58.9	559~780	69.6~97.1	688.7	73.4
長 江 上 流 經 濟 圈	1,283	62.6	1,445	45.7	505~665	62.9~84.1	591.0	63.0
華 南 經 濟 圈	2,524	123.1	3,436	108.6	652~1,110	81.9~138.2	1,170.9	124.8

자료: KIET.

주: 표6과 동일.

<표8> 우리나라의 對中國 圈域別 投資 現況(1994. 6월말 현재)

단위: 件, 千 달러

		許可 件數	許可 金額	投資 金額
總 計		1,549	1,327,618	707,266
東北經濟圈	遼寧省	329	68,974	94,732
	吉林省	159	77,524	33,228
	黑龍江省	111	85,898	51,019
	小計	599(38.7)	332,396(25.0)	178,979(25.3)
環渤海經濟圈	河北省	42	30,681	16,512
	山東省	416	472,305	235,563
	北京市	106	81,417	55,660
	天津市	163	187,040	101,492
	小計	727(46.9)	771,443(58.1)	409,227(57.9)
黃河中流經濟圈	山西省	2	1,300	651
	陝西省	4	996	975
	河北省	5	1,424	404
	小計	11(0.7)	3,720(0.3)	2,030(0.3)
上海經濟圈	江蘇省	61	69,165	42,851
	浙江省	17	6,569	3,853
	上海市	31	39,988	13,795
	小計	109(7.0)	115,722(8.7)	60,499(8.6)
長江中流經濟圈	安徽省	3	5,783	2,000
	江西省	1	130	130
	湖南省	3	964	670
	湖北省	4	970	510
	小計	11(0.7)	7,847(0.6)	3,310(0.5)
長江上流經濟圈	貴州省	1	754	754
	四川省	2	1,240	670
	雲南省	-	-	-
	小計	3(0.2)	1,994(0.2)	1,424(0.2)
華南經濟圈	福建省	26	19,332	13,107
	廣東省	53	56,446	36,416
	廣西自治區	2	15,025	25
	海南省	3	2,600	1,400
	小計	84(5.4)	93,403(7.0)	50,948(7.2)

자료: KIET.

주: 표6과 동일.

<표9> 韓·美·日 3국의 圈域別 進出 現況

地 域	韓 國		美 國		日 本	
	件數	比重(%)	件數	比重(%)	件數	比重(%)
東 北 經 濟 圈	559	38.7	142	15.4	763	41.4
環 渤 海 經 濟 圈	727	46.9	266	28.6	373	20.2
黃 河 中 流 經 濟 圈	11	0.7	31	3.3	31	1.7
上 海 經 濟 圈	109	7.0	240	25.8	371	20.1
長 江 中 流 經 濟 圈	11	0.7	41	4.4	16	0.9
長 江 上 流 經 濟 圈	3	0.2	26	2.8	18	1.0
華 南 經 濟 圈	84	5.4	176	18.9	263	14.3
其 他	-	-	8	0.9	10	0.5
合 計	1,549	100.0	931	100.0	1,845	100.0

자료: KIET.

주: 표6과 동일.

3. 其他 憂慮 事項에 對한 展望

(1) 小數 民族에 의한 分열 가능성

- 鄧死後 中國의 分열 가능성과 관련하여 소수 민족에 의한 독립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中國의 민족 구성, 즉 漢族을 포함한 56개 민족중 소수 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한데 그나마 55개 민족으로 나뉘어져 있음.
- 또한 漢族의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漢族의 비율이 현지 소수 민족을 능가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250년간 그들을 통치하는 과정중에 형성

된 문화적인 흡인력은 민족주의에 의한 분열 위기를 대폭 경감시킬 것임.

- 따라서 舊소련과 같이 민족별로 나라가 분열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현시점에서 볼 때 소수 민족에 의한 분열 가능성은 희박함.

(2) 省別 분리 독립 가능성

- 地方分權化 추세 및 중앙 정부와 지방(省)간의 의견 충돌로 중국의 분열을 연결시켜 생각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개방 정도가 가장 높은 廣東省의 경우,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한다는 설이 있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경제적인 성과를 거둔 일부 省들의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자율권이 정치적인 독립이 아닌 것으로 파악됨.
 - 일부 학자들은 군부에 의해 중국이 분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현 중국의 권력 구조에서 볼 때, 가능성이 희박함.
- 아울러 地方分權化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중앙과 지방이 서로 타협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향후 중국이 省별로 분리 독립될 가능성은 낮으며, 주로 경제 관련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중앙 정부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낼 것으로 전망됨.

4. 綜合 判斷

- 鄧死後 운용될 과도체제는 그동안 후계자 육성 조치, 鄧의 공식 직책 은퇴 및 鄧의 의도 등에 의해 사실상 鄧생전에 이미 가동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鄧死亡 직후 체제 내부의 충격은 예상외로 적을 것으로 추정됨.
- 향후 중국 공산당내 정권의 향배는 기본적으로 과거와 같이 군부의 장악 여부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누가 경제 정책을 적절히 구사하느냐 역시 주요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 鄧死後의 중국은 정치는 중앙집권, 경제는 지방분권이라는 형태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마치 鄧이 정치는 左, 경제는 右(政左經右), 즉 명분과 실질을 적절히 배합하여 개혁·개방 정책을 수행해 온 것처럼, 서로 상치되는 것 같으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中國의인 政治·經濟 構造」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그렇다고 해서 중앙의 정치, 지방의 경제라는 식의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중

양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통제가 필요한 부분(예를 들어 식량, 에너지 등)에 대해서 관여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임.

- 결론적으로 향후 중국은 법적인 근거나 전통이 빈약한 관계로 「공식적인 연방제」가 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권력이 서로 다른 레벨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관리되고 심지어는 같은 레벨에서도 권력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당분간 人治를 근거로 한 「非公式的인 聯邦制」 형태를 지향할 것으로 전망됨.

III. 鄧小平 死亡이 東北亞 情勢에 미치는 影響

- (影響)鄧의 사망이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對外 路線)혁명 1세대인 鄧의 사망은 江澤民을 위시한 제3세대 지도자들의 정책 결정 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며, 관료 출신인 이들에 주도하는 중국은 보다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할 것임.
- (對韓半島 政策)따라서 鄧의 사망을 계기로 北中 관계는 「혈맹 관계」에서 「통상적인 외교 관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반면 韓中 관계는 경제적인 실익을 바탕으로 정치·경제면의 교류 확대가 예상된다.

1. 東北亞 情勢

- 鄧小平 사망 자체가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외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鄧사후 과도기를 순조롭게 넘길 경우,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할 것이며, 동북아 지역내에서도 자신의 지분 확대를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中華經濟圈(중국 + 화교 기업 소재국)이 부상할 경우, 동북아 지역내 중국의 영향력은 대폭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중국은 향후 동북아 지역내 지분 확보와 관련, 국내 문제에 치중해야 할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 잠재되어 있던 각종 문제(과거사, 영토 및 정치 관련 문제)를 표면화 혹은 쟁점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아울러 미국 및 일본과의 통상 관계에서 마찰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鄧死後 불안한 과도체제가 지속될 경우, 국내 문제에 치중하게 될 중국은 對美·日 관계에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
- 결론적으로 鄧이라는 總設計師의 부재는 江澤民을 비롯한 제3 세대 지도층의 정책 결정력을 제고시킬 것이며, 혁명 세대가 아닌 관료 출신인 이들에 의한 중국 외교는 보다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할 것임.

2. 韓半島 情勢

- 鄧死後 전개될 중국의 새로운 외교 노선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革命 1세

- 代간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만약 중국 내부가 불안해질 경우, 김정일 체제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김정일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개혁·개방을 해야 하는데 결국 중국식 모델을 원용할 것이라는 사실임.
 - 중국은 북한에 대해 자신들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안정된 주변 국제 환경 유지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만을 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의 북한은 권력 세습과 경제난으로 인하여 중국측의 부담이 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임.
 - 北美, 北日간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고립 상황 개선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김정일 후계 체제 구축 및 안정에 매우 중요함.
 - 그러나 北美 관계가 순조롭게 개선될 경우, 북한은 과거 구소련과 중국 사이에서와 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줄다리기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과정중 중국의 對北 영향력은 다소 약화될 것임. 아울러 미국과 관계를 갖게된 북한의 대외 활동 폭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결론적으로 鄧死後 北中 관계는 이념(정치)보다는 현실(경제)을,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심으로 한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혈맹 관계 --> 통상적인 외교 관계).
 - 반면 중국은 경제적인 유대 관계가 있고, 상호보완적인 남한과의 관계에 보다 치중할 것으로 전망됨(94년 李鵬의 방한에 이어 금년내로 江澤民과 喬石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음).
 - 동북아 지역내 입지 강화의 일환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와 남북한 교차 승인 실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
 - 만약 중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中華經濟圈이 부상할 경우, 동북아 지역내 한국 경제의 위상이 위축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점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함.

IV. 企業의 對應 方案

- (中國 市場에 對한 姿勢) 중국을 단순한 수출 시장 혹은 값싼 노동력의 공급원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함. 아울러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세에서 접근해야 함.
- (圈域別 特性에 符合하는 交易과 投資)鄧小平 死後 「圈域別 經濟圈」의 부상이 예상됨. 따라서 우리 기업의 對中 교역이나 투자도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

1. 韓國 經濟에 미치는 影響

- 鄧以後 중국이 안정을 유지하든 또는 과거 군벌 시대와 같은 혼란·분열 상황이 전개되든 모두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지금까지 韓中 경제 관계 발전 추이에서 볼 때, 안정된 중국 경제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불안정한 중국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중국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6대 교역국임.
 - 교역량: 93년 90억 달러 --> 94년 120억 달러 --> 95년 150억 달러(예상)
 - 2000년에는 양국간의 교역액이 500억 달러가 예상되어 2위 교역국인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비슷한 교역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KOTRA, 94. 3).
 -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 94년 11월말 현재 對中 투자 누계 건수는 1,895건, 누계액은 15억 8,200만 달러를 기록.
 - 93년 對中國 투자는 허가 기준으로 총 해외 투자 1천 50건의 59.9%를, 총 투자 금액인 18억 7천 2백만 달러의 33.2%를 각각 차지함으로써 對中國 투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냄.
- 鄧以後 경제적인 지방 분권화가 가속화될 경우,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각 지방이 자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의 대중 수출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중국 공산당내 권력 투쟁이 전개되어 보수파가 득세할 경우, 지방에 대한 통제력 강화는 물론이고 현 개혁 정책의 폭과 속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임.
- 이는 중국 경제 전반은 물론 개혁·개방 노선이 위축되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 있으므로 우리의 對中 교역(투자 포함)는 당분간 소폭의 증가 혹은 정체를 맞이할 수도 있음.
- 결론적으로 鄧以後 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는 권력 승계의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안정된 경제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됨.
 - 구체적인 조치로 안정된 경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적인 조정 정책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음.
 -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 기업의 대중 교역과 투자의 신장세가 당분간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2. 中國 市場에 對한 姿勢

- 90년대 들어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한국은 본격적인 아시아 시장권으로 회귀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함. 따라서 우리는 중국을 단순한 수출 시장 혹은 값싼 노동력의 공급원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함.
 - 중국 시장에 대해 내수 시장 진출과 제3국 수출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투자 지역으로서의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아울러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세에서 접근해야 함.
 - 특히 향후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인 형태가 될 中華經濟圈이 형성될 경우를 대비한 중국내 교두보 확보는 필수적임.
-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그룹의 對中 진출은 향후 중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내지는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중국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외부에 노출되는 유망 업종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지금은 우리 그룹의 對中 진출도 연해 지역에서 내륙으로 이동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단계로 사료됨.
- 상술한 접근 방식과 관련 그룹 내부에서 우선 실시해야 할 조치는 他그룹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 환경에 적응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중국을 한나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함. 다시말해서 중국은 30여개의 나라(3개 直轄市, 22개 省, 5개 自治區)가 하나로 이루어진 나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되 가능하면 권역별 담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사료됨.

- 중국 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中央 정부, 省 정부, 주요 도시별로 각각 분리하여 접근하되, 우리측을 중심으로 中央, 省, 주요 도시를 동시 다발적으로 엮어 놓는 자세가 요망됨.
- 특히 대북한 투자와 관련하여 중국 기업이나 조선족 기업을 활용, 對北 투자의 위험 분산하는 것도 바람직 방안이 될 수 있음(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이 대중국 투자시 홍콩 기업이나 화교 기업과 협력하여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원용할 필요가 있음).

3. 對中 交易 및 投資 方案

- 첫째, 경제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역과 투자 방안 모색.(〈표3〉참조)
- 둘째, 업종별로는 중국 경제 구조의 변화와 제3차 산업에 대한 개방 조치에 따른 유통·서비스업 등에 대한 진출 모색.
- 셋째, 수시로 변화되는 중국의 경제 정책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투자와 현지 기업 운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권역 내에 대기업과 협력 기업간 혹은 중소 기업간에 동반 진출(일본의 이쓰쯔, 도시바, 미쓰이 물산 등이 이러한 진출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
- 넷째,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실시로 「社會主義 市場經濟」체제내 시장 경제 요소의 증가와 함께 내수 시장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수출보다 내수에 중점을 둔 투자 집중.
- 다섯째, 향후 중국을 통한 러시아와의 변경 무역이나 남북 통일에 대비하여 이들 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東北 3省에 대한 그룹의 인식 전환과 교역·투자 방안 모색 등.

(金丁均)